

충청남도 민선자치도정 2기의 정책방향 - 2000년도 진입을 위한 정책설계 -

최 병 학
(崔秉鶴)

충남발전연구원
자치행정부장



- I. 서 언
- II. 민선자치 2기 도정운영 추진구도
- III. 도정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역량 고도화 전략
- IV. 자치행정 및 정책개발분야 중점 추진방향
- V. 결 언

I. 서 언

2000년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종래 고비용-저효율의 운영시스템은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나 할 것 없이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무국경(borderless)'의 경쟁시스템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우리 경우도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 작업에 임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식(행태)이 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왜 제도(구조)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가 그 까닭을 알게 된다(지만원, 1993, pp.32~37).

최근 강도높게 추진된 일련의 구조조정을 직제 개편 및 정원감축 등 단지 외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저비용-고효율을 지향하려는 행정혁신이 깔려 있다. 원래 행정에는 '혁명'(revolution)이란 개념이 없으며, 단지 '혁신'(innovation) 또는 '개혁'(reform)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혁명적'(revolutionary)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종래 고착화 되다시피한 우리의 행정시스템에 인위적인 부서통폐합, 정원감축, 정년하향조정, 임금피크제, 실적제 등의 도입은 물론, 일부는 계약제와 연봉제 실시까지 펼쳐지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어차피 넘

여야 할 산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2000년에 진입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어떻게 산을 넘고,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하는가이다. 그런즉, 적합한 방법(method)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비전을 세우는 것과 목적(goal)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는 '혁명적인' 직제개편과 인사혁신으로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체제 조기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목표는 무엇이겠는가? 2000년도 진입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행정환경-세계적, 국가적, 지방적-에 적합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그 운영효율을 고도화함으로써, 충남도정이 이룩해야 할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초일류 행정서비스를 고품질의 도민만족행정, 혁신적인 도정운영과 공직프로화를 통한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며, 특히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운영시스템 정착 및 행정생산성 극대화 추진은 물론, 국가사회적 난제인 IMF 조기극복을 위한 행정지원체제의 고밀도 재구성도 가능해 질 것이 기대된다. 아울러 최고·최선의 성과추구라는 공직풍토를 확고히 만들어 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바, 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역량을 신장시킴으로써, 행정의 주인인 도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만 한다.

그러한 점에서 금번에 이루어진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팽창지향적'이고 '확대재생산 구조'였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행정관료제를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했다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깔려진 기본논리를 살펴보면, 단적으로 전통적 행정체제가 규칙위주·투입중심·사후처리방식임에 반해, 혁신적 행정체제는 임무위주·성과중심·사전대응방식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Osborne and Gaebler, 1992 ; 충청남도, 1998, 8a, p.5).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민선자치도정 2기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기본바탕 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견고히 다짐하기 위한 행정이념·도정철학을 공고히 함으로써, 「인본·경영행정」을 한차원 높인 「대화합·신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특히 「淸風운

1) 전략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합당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후 '목표'(object)를 세우고나서 여기에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될 수없는 것은, 그러한 목적이나 목표를 조직 내부적(자체적)으로만 설정할 수 없고, 반드시 주변여건이나 환경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여, (다원주의하에서) 조직의 목표는 주변환경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어떠한 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그 조직의 구조가 적합성(relevancy)을 가지게 될 때-유질동상(類質同像 : isomorphism)을 이루게 될 때-그 조직의 운영효율은 극대화되며, 이러한 상태(desired state)가 곧 조직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The structure follows strategy)는 것이며,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미래상을 상정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필자, 1995, pp.337~339 ; Chandler, 1962 ; Ansorff, 1979, p.44).

〈표 1〉 전통적 행정체제와 혁신적 행정체제의 비교

전통적 행정체제	혁신적 행정체제
노젓기(rowing)	방향잡기(steering)
직접 처리해 줌(service)	할 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서비스제공에 경쟁도입
규칙중심의 관리	임무중심 관리
투입중심 예산	성과연계 예산
관료 중심(공급자 중심)	고객 중심(수요자 중심)
지출 지향	수익 창출
사후 치료	예측과 예방
집권적 계층(명령과 통제)	참여와 팀웍(협업과 네트워크 형성)
행정메카니즘	시장메카니즘

동」을 위시한 「충남정신」을 도민 및 공직자의 신념체계 내면화를 통해 시대정신(der Zeit)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는, 도민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의 강화로서, 200만 도민을 자치도정의 주인으로 대접하면서 어디까지나 도민복지에 초점을 둔 도정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강렬한 고객지향성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창출·제공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도민만족은 도정발전의 요체이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임 재인식하여, 「21세기 지방시대의 꽃」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셋째는, 창발적(創發的) 시책개발 및 태스크포스 팀중심 운영체제 조기정착,²⁾ 특히 고위직 자기 직무 전념체제의 조직운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하며, 혁신적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확대 도입으로 종래 형식·절차위주의 관리방식을 과감히 타파해 나가야 한다.

넷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 전략 조기구축으로서, 통합적 4대권 개발경영체제 확립 및 특화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역량·자치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강화해야만 한다.

2) 금번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결과, 충청남도에서는 8실·국·관·본부, 38과, 156담당으로 조정되어 지난 9월 5일자로 관련직제의 조례·규칙공포가 있었다. 특히 156담당은 종래의 '계' 조직이 '담당'으로 전환된 것이나, 여기에는 종래의 프로젝트 팀조직과 같은 4개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충청남도는 미리부터 조직운영의 탄력성·기동성·전문성을 확보, 대비해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팀제운영은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논리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임창희·가재산, 1996, pp.241~261 ; 하인호, 1996, pp.142~157 각각 참조).

II. 민선자치 2기의 도정운영 추진구도

1. 도정여건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21세기 진입을 둘러싸고 낙관론·중립론·비관론 등 논란도 적지 않지만, 공통적인 것은 세기말적 전환기에서 「새로운 1000년, 밀레니엄」의 향배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이데올로기 종식 및 실리적 맹방관계 성립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무국경(borderless)의 무한경쟁체제 가속화로 인한 생존조건 압박은 선진자본 침투와 실리위주 국제관계의 구조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상대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긴히 요청되고 있으며, 성과극대화를 겨냥한 핵심역량 무기화 추세 또한 점차 가열화되고 있다(최병학 외, 1998, 8, p.1).

한편,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정부수립 50주년 및 역사적 정권교체를 통한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필두로 한 전반적인 국가경영체제 재정립이 이루어지면서 「제2 건국운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하며, 이로써 1900년대의 마무리를 통해 사실상 21세기로 진입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 병행함으로써 최근 우리가 맞고 있는 IMF 경제난의 조기극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 전개에 있어 고용조정·실업구제와 개방화·규제완화(deregulation)를 동시에 이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도 IMF 경제난 조기타결을 위한 한시적 교육책 추진은 고용조정 및 실업구제의 동시타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로써 민생안정

과 경제활력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배가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을 향한 대응세대 구축에 만전이 요구되면서 대내외적 국가역량 확보를 통해 장차 남북통일에 대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중차대한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다시 이를 지방적 차원에서 보면, 「민선자치 2기」의 출범으로 지방자치 제도화로 풀뿌리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이룩했던만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거도적 극복노력이 요청되고 있고, 총체적 위기 의식 및 현실적 해소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지방화시대의 「충남 100년 대장정(大長征)」을 기치로 내걸고,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등 행정혁신 단행으로 자치행정체제 재정립 기회를 맞이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적 동참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경기하락 및 실업사태 해결에 전력을 경주하면서 2000년대에 본격 진입하기 위한 지방정부 모델구축으로 충청남도 정책비전 설계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2001년 전국체전」 및 「2002년 꽃박람회」가 예정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함께 4대권개발 및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다(충청남도, 1998, 7b).

2. 도정운영기조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당면현안인 경제난 극복과 함께 「충남 2000년 기반구축」에 도정운영의 핵심을 두면서 도정운영 전반에 혁신성·역동성·창의성을 적극 구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제2

건국」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지방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창출·확산시켜야 할 것이다(충청남도, 1998. 6b, pp.1~2).

그런즉, 행정서비스와 지역안전 등에서 전국최고의 도정을 지향하면서 「충남 2000년」 정책과제를 알차게 마무리함으로써 희망 속에 도약을 재다짐, 가장 앞서가는 도정수행으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다음과 같은 도정목표를 수립, 실천해야 한다.

첫째는, 21세기 본격 진입을 위한 도정역량의 결집 및 혁신적 구조조정으로 도정운영의 고도화 추진을 통해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정책수행체제 모델구축을 이룩함으로써 명실공히 「정책수행형 충남도정」을 지향해야 한다(최병학 외, 1998. 6, p.2).³⁾

둘째는, 지방 차원의 경제활성화 추진으로 IMF 경제난 조기극복 및 범도민적 대응능력 확보를 통해 「역량구축형 충남도정」을 이룩해야 한다.

셋째는, 21세기에 성공적 진입을 위한 도정 핵심역량의 고도화 추진으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경쟁우위형 충남도정」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어디까지나 현행행정과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구상, 실천하고

특히, 「경제난 극복」에 도정역량을 집중, 사회보장체제 강화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정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봉사행정체제 구축과 적극적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道'를 실현해야 하고, 「충남 2000년」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도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 요청된다(최병학, 1998. 6a, p.2).

무엇보다도 민선자치도정 2기 및 21세기를 지향하는 성숙한 자치문화의 정립·정착이 요긴한 바, 이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발전에 부응하는 의식·행태의 탈바꿈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종래의 20세기와는 차별화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에 도정역량을 고도화해야 하는 바, 특히 미래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도정의지 결집과 책무인식 및 그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혁명적인 지방행정 구조개편·기능조정 완결로 「개혁모델」정립을 이루어야 하는 바, 특히 공직프로화를 통해 행정이 21세기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부각되도록 고품질의 봉사행정체제

3) 금번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 충청남도의 직제개편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정책수행형 지방정부' 형태를 갖추었다. 종래의 기획관리실을 「정책기획정보실」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에 「정책관리관」을 위시한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국(局)단위에 주무정책과(課)를 두도록 하였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과감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지방정부란 지방수준에서의 입법·사법·행정을 포괄하는 미국식 주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종전의 학문적 관행대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편의상' 간주했던 것과는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Morsher, 1985 ; 안병만, 1994, 제7장 각각 참조).

를 조기에 구축해야 하며,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각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의 폭넓은 참여와 대화합 속에 새로운 도약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다음과 같은 운영기조 속에 도정운영에 임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최병학 외, 1998, 6, p.2).

먼저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행정혁신 및 운영

체제 고도화 추진으로 '정책수행형' 부서(실국) 기능전환으로 도정체제를 재정립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의 자치역량(self-government competence) 결집을 위한 '통합관리체제' 구축, 운영으로 도정-시군정간 효율적 연계강화 및 협력체제 조기구축을 추진해야 한다.⁴⁾

그리고 국정과제 및 「제2 건국운동」에 부응하는 도정추진을 배가하면서 태스크포스 형태의 '제2

4) 특히, 민선 2기로 접어들면서 국정-도정-시·군정 간의 「연계구조(linkage structure)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중앙의 통합성 논리」와 「지방의 자율성 논리」 간의 균형·조화의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수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도정-시·군정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조사」에서는 「만일, 도정과 시·군정간 관계가 분절·단절되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선택적 예시문을 전한 바 있다.

- ① 도정-시군정간 관계에 균열이 생겨 업무협조가 심히 곤란
- ② 충청남도 지방행정이라는 큰 테두리가 얇어져 자치역량·지역역량이 크게 약화
- ③ 자치단체간 양보와 타협을 불허하는 과잉·경쟁양상 만연(특히 님비·핍취현상)
- ④ 주어진 권한행사를 포기한 채 상급기관에 매달리는 식의 의존성향(특히 의사결정시)
- ⑤ 도정-시·군정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행정행태(기회주의)
- ⑥ 인사교류가 막혀 보직부여, 배치전환 등 순환인사와 승진불능사태로 인한 인사침체
- ⑦ 무리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왜곡현상 초래
- ⑧ 기구의 설치·변경·폐지에 있어 서로 완전히 분리, 독립된 배타적 운영체제로 이행
- ⑨ 재정지원·협력 부실로 적기(適期)에 사업추진을 못하는 등 심각한 비능률 야기
- ⑩ 기 타

이어서 “현재 도정과 시·군정 간의 효율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선택적 예시문을 전한 바 있다.

- ① 도정시책과 시·군정시책이 각기 입장과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
- ② 자체 개발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자기 자체단체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
- ③ 지난 관치(官治)행정방식이 몸에 배어 협력·협조, 협상-타협을 모르기 때문
- ④ 도정시책과 시·군정시책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피차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
- ⑤ 아직까지도 도정-시·군정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
- ⑥ 지방화-분권화 원리에서 볼 때 자치고권(自治高權)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기 때문
- ⑦ 민선자치의 정착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협력고권(協力高權)을 아예 도외시하기 때문
- ⑧ 기 타

건국운동 추진기획단'을 기점으로 한 도정의 통합 조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울러 21세기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도정역량의 총체적 결집으로 「혁신성·일관성·통합성」 위주의 도정운영 체

제구축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민선자치 2기의 도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행정내부용과 충남도 민용으로 구분하여 설정, 운영하고 있다.

〈표 2〉 민선자치도정 2기의 10대 중점 추진과제(행정 내부용)

1. 혁명적 차원의 「신경영행정」 체제구축
2. 「경제난 극복」과 기업활동 적극 지원
3. 농업경쟁력 제고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4.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지역균형개발 촉진
5. 량보다는 質위주의 「환경·복지충남」 건설
6. 21세기에 걸맞는 「문화·관광」 육성
7. 과학기술진흥과 「정보화」 선진충남 건설
8. 재난·사고 없는 「지역안전」 확보
9. 세계를 향한 「지방외교역량」 강화
10. 시대정신으로 「충남정신」 발양

〈표 3〉 민선자치도정 2기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충남도민용)

1. 혁명적 차원의 「신경영행정」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2. 경제난을 이겨내어 「도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간다
3. 농업기술의 발달 속에 「풍요로운 농어촌」을 건설한다
4. 道 전체를 골고루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5. 「환경」을 보호하고 더불어사는 「복지사회」를 만든다
6. 「문화와 관광」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육성시킨다
7. 「과학기술」과 「정보화」로 편리하게 살게 한다
8. 재난과 사고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한다
9. 5대양 6대주로 뻗는 「세계 속의 충남」을 건설한다
10. 「충남정신」을 시대정신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III. 도정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역량 고도화전략

1. 도정 순기별·부서별 주요 정책방향

현단계는 민선자치도정 1기의 성공적 토대 위에서 2기의 새로운 출범을 통해 도정의 혁신성·통합성 확보를 위한 도정역량의 배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다음과 같은 도정목표에 중점을 두면서 도정순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최병학, 1998. 6a, p.2).

즉,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향한 도정 핵심역량의 고도화 추진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초일류의 충남도정」을 실현해야 하며, 도정양대축인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한 차원 끌어올린 「화합행정·신경영행정」운영체제 조기구축함으로써 「고품질의 충남도정」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200만 도민과 1만 6천여 공직자의 성취동기와 발전의지를 한데 모아 「21세기 복지충남시대」를 능동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참봉사의 충남도정」을 지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정수행목표를 기본토대로 삼아, 앞으로 민선자치도정 2기의 도정순기별 역점방향을 세워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최병학 외, 1998. 6a, p.3).

첫째, 98년도는 「대통합 속에 힘찬 새출발과 대전진」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정기조의 재정립 속에 차원높게 성숙한 자치도정 운영체제 재정비 및 21세기를 향한 지방행정의 「혁신적 재설계」로 도약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99년도는 「2000년대 성공적 진입채비 완료」의 해로서, 자치도정 역량결집으로 「2000년대 진입장벽」 사전제거 및 분야별·부서별 핵심역량 고도화 추진으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해 「새로운 밀레니엄-2000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셋째, 2000년도는 「대망의 21세기 도정운영 본격화 추진」의 해로서, 「세기적 전환의 정점」에서 중차대한 도정책무를 최선의 노력을 통해 최상의 결실로 승화·발전시키고, 특히 「복지충남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200만 도민여망에 명실공히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2001년도는 「미래시대를 열어가는 자치도정 구현」의 해로서, 한차원 더 높게 변모된 도정여건 및 도민여망에 적합한 초일류 행정서비스 공급체제를 완비, 도민의 「삶의 질」 수준의 획기적 향상 및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을 가시화해야 한다.

다섯째, 2002년도는 「민선자치도정 2기의 성공적 소임 완수」의 해로서, 「21세기 복지충남」실현을 향한 도민과 공직자의 일치된 의지·정념을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로써 구체적 마무리에 임해야 한다.

한편, 도정 부서별 주요 정책방향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새롭게 탈바꿈된 자치도정 조직편성을 중심으로 효율, 경쟁, 품질, 성과위주의 과업수행을 위해 조직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야 할 것이다(충청남도, 1998c ; 최병학 외, 1998. 8. pp.4~5).

〈표 4〉 민선자치도정 2기의 부서별 주요정책방향

부 서 별	주요 정책방향
정 책 기 획 정 보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 및 정책기획 운영 • 도정의 기획·조정·종합기능의 고도화 추진 • 지방정책 전담운영 및 실국별 정책조정 수행 • 예산운영 체계화 및 중장기 투자·자금관리 • 도민편의 향상을 위한 법무·통계행정체제 구축 • 지식·정보시대에 대비 첨단정보화 촉진
자 치 문 화 관 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자치행정체제 구축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환경 개선 • 도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지방세정 구현 •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재 보존관리 내실화 • 4계절형 관광충남 구현을 위한 관광진흥 • 체육진흥과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추진
농 립 수 산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활력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획기적 개선 • 고품질 식량증산 및 지역특작물 생산·육성 • 농업기반 조성 및 농지·농수공급체제 고도화 • 경쟁력 있는 축산업 구조개선 역점 추진 • 산림보전 및 산지자원화사업 효율적 운영 • 수산업 고도육성 지원 및 해양자원 개발 추진
경 제 통 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형 유통기반 조성 및 물가안정 • 기업의 자금·기술·판로·신용·수출지원 역량 강화 • 경제실리 추구를 위한 다원적인 국제교류 협력확대 • 첨단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노력 강화 • 노사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실업자 생활안정
보 건 복 지 여 성 환 경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충남 구현을 위한 지역복지체제 구축 •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사업 운영내실화 추진 • 건강충남을 향한 종합 보건생활관리체제 정착 • 푸른충남 실현을 위한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 • 맑은물 보전관리 및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부 서 별	주요 정책방향
건설교통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균형개발 촉진 • 살맛나는 정주체계 조성 및 신도시개발 추진 • 도로망 확충·관리 효율화 및 교통편의 향상 • 수자원관리 및 완벽한 방재관리체계 구축 • 토지관리 및 지적전산·지적정보 운영내실화
소 방 안 전 본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충남 구현을 위한 생활서비스형 소방관리 • 도민 생활편의 지향의 방호 및 구조역량 신장 • 완벽한 상시 재난안전관리체계 조기 확립
공 보 관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대변인 제도운영 • 개성있는 도정 기획홍보체계 조기 정착
감 사 관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운영체제의 전문화·첨단화·기동화 촉진 •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문형감사 도입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내 일반 행정관리업무의 통합운영 추진 • 타부서 행정지원기능 원활화 및 효율화
농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농촌 구현을 위한 시험연구체계 확립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기술지도 활성화
공 무 원 교 육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종합발전체계 구축 • 교관정예화를 위한 연찬·연구활동 강화 • 정보화기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체계 정립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상시예방연구 추진
청 양 대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실무 겸비형 우수 전문인력 양성 추진 • 智德體 전인교육 종합발전체계 조기 구축 • 지역사회 봉사활동체계 강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및 가시화 • 백제문화 선양 및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
종 합 건 설 사 업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의 택지개발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 완벽한 건설공사 및 도로유지 관리

2. 핵심역량의 고도화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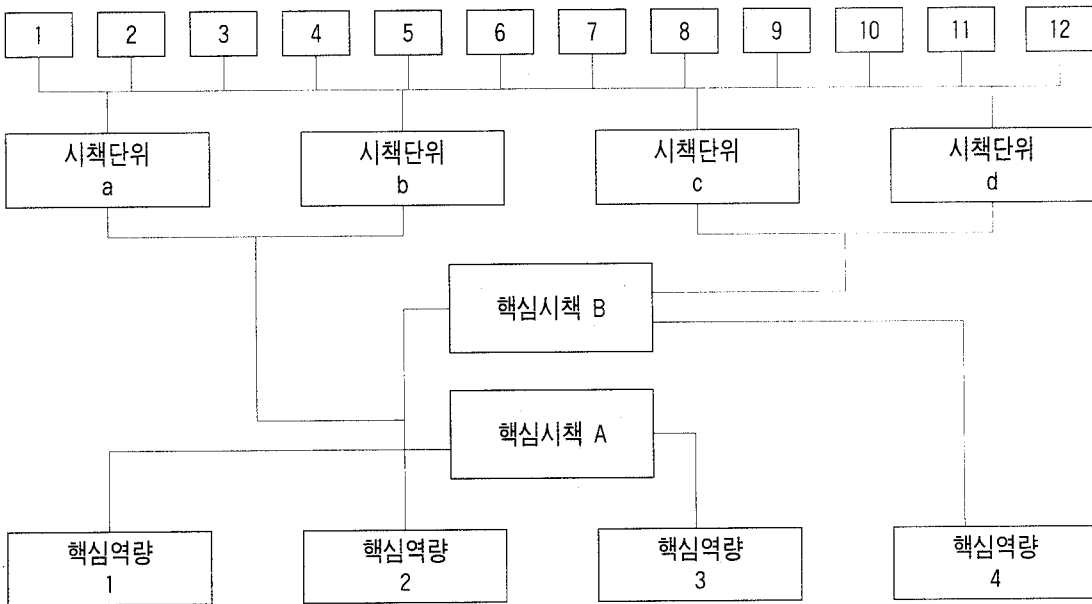
자치충남도정이 중 장기적으로 경쟁우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관한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최근 기업체가 보유하는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역량인 바, 앞으로 충남도정에서도 유감없이 적용,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최병학 외, 1998. 5, pp.4~5).

특히, 「고도화 전략」(high-powerful strategy)이란 단순한 극대화(量化)가 아닌 질관리(QM)를 포함하는 보다 세련된 개념구조로서(어윤대·방호

열, 1996, pp.339~341),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전 분야를 통해 타지역 지방정부와 차별화가 가능한 분야를 엄선,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청된다.

이에 무엇보다 먼저 물질위주로 치닫는 현실조건을 감안하여, 「정신문화혁명」을 인본·대화합행정 및 「淸風運動」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구분, 추진하되 관련 시책분야의 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기적 관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현 IMF 경제난 극복을 충분히 고려, 충남도정의 「신경영행정」과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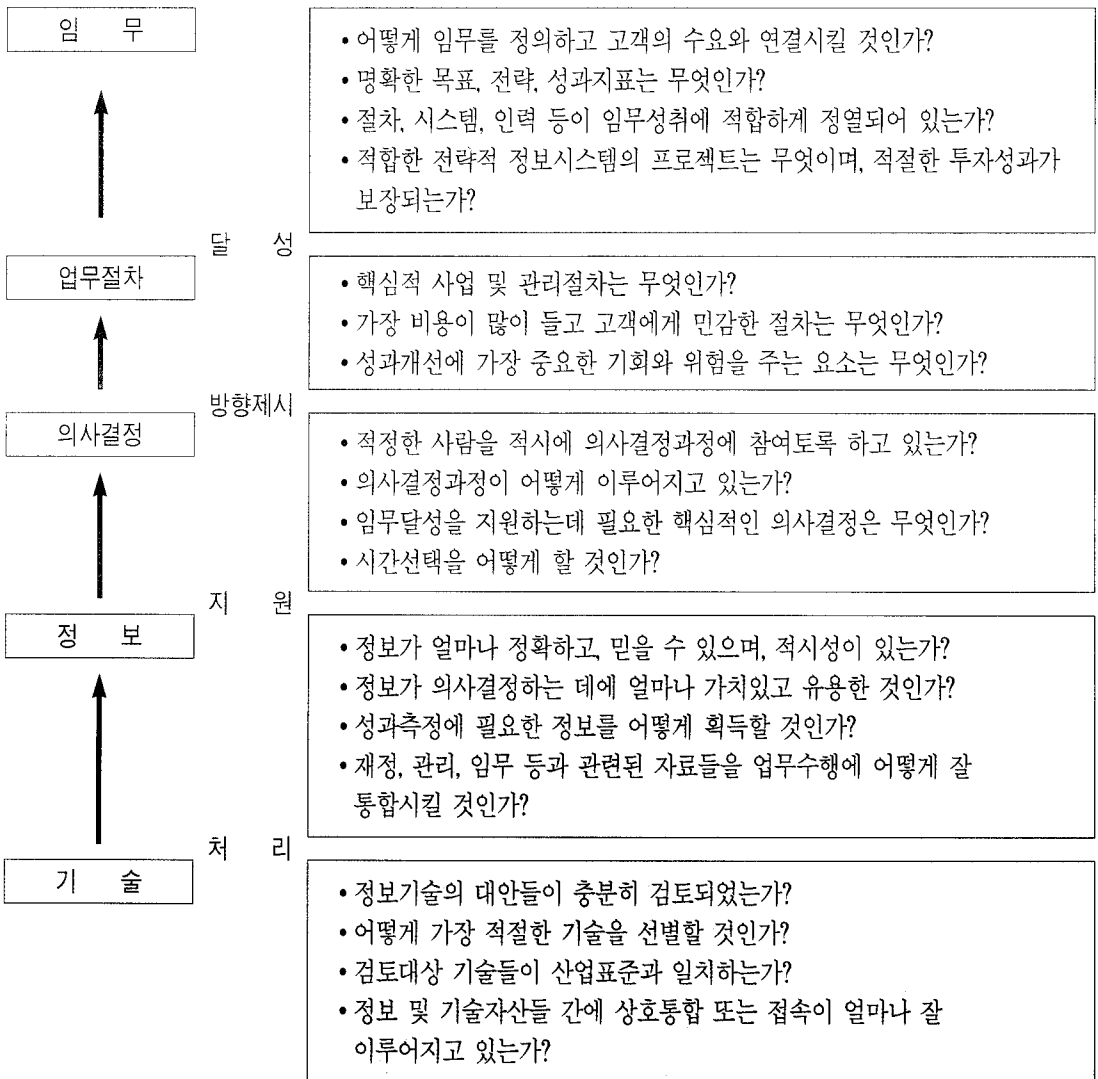
〈표 5〉 충남도정의 핵심역량 고도화 전략 : 경쟁력의 근원



특히, 핵심역량의 선택기준은 가능한 한 다양한 시책추진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핵심역량에 의해 추진된 역점시책이 충남도민(최

종소비자)에게 충분히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경쟁자(타지역 지방정부)가 모방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민선자치도정 2기 및 21세기 충남

〈표 6〉 전략적 정보관리의 추진과정



도정의 핵심역량 고도화전략은 자치행정체제 구축 및 그의 정상화 수준 유지를 위한 정책대응 차원에서 충남도정의 경쟁력 원천을 예의 파악, 파악 효과가 지대한 창발적 시책을 엄선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민선자치도정 2기를 이끌어갈 충청남도의 정책기획기능은 「전략적 정보관리」(strategic information management)의 강화를 통해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했으며, 이로써 행정사무를 포함한 정보기술의 효율적 운영 관리는 직무충실화의 첨경이자 행정혁신의 요체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정보관리와 성공적 직무수행간의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강조하는 것이다.

Ⅳ. 자치행정 및 정책개발분야 중점 추진 방향

1. 정신문화혁명

최근 물질위주의 가치관 팽배로 배금주의(mamonism), 물질만능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함으로써, 급기야는 인명 경시, 도덕·예절 상실, 기초질서 붕괴, 공동체 해체로 크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병행,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며, 필히 인류도덕이 뒷받침되어야 「건강사회」를 이룩할 수 있음은 이미 바벨론, 로마제국 등 역사적 교훈에서 입증되고 있다. 충남은 충절도리의 본고장으로 이것이 도민의 정신적 기저를 형성해 왔으

며, 수많은 의인·열사를 배출한 빛나는 전통의 지역이다.

이미 민선자치도정 1기의 중심철학이었던 「인본행정」은 자치행정의 전국적 백미로서 인간본위, 생명존중, 도민위주의 인본행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특히 「인본행정」의 기초에서만 「경영행정」 성립이 입증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최병학, 1997, 8, pp.95~1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인본행정을 새롭게 한차원 끌어올린 「정신혁명운동」이 요청되고 있는 바, 이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정신적 가치통합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에 충청남도가 가치통합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할 당위적 입장에 처해 있다. 즉, 21세기의 거대한 파고와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200만 도민의 정신적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민관합일의 정신적 통합프로그램」 수립, 실천이 매우 절실하다(최병학 외, 1998, 6a, pp.6~8).

이에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방향을 세워 범도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민선자치도정 2기의 가장 중요한 도정운영기조로 설정, 추진함으로써, 「인본·대통합행정」을 자치도정의 제1의 의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민·관·산·학 일치단결로 지역적 통합역량의 상승효과 창출로 충남의 저력을 구체적으로 발현하는 「폭발적 에너지」를 형성시키도록 해야 하면서, 역사적 전통과 충남인의 기본정서, 그리고 최근의 현실상황, 21세기 미래상을 유기적으로 잇는 「정신적 구심체」로서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함으로써, 200만 도민 특유의

「親和力」(affinity)을 고도화하는 정신혁명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분야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설정,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공직자정(뉴크린)운동」으로서 부정부패 일소, 청렴결백, 수범행위, 투명행정-공개행정-신뢰행정으로 「청백리정신」을 구현한다.

둘째는, 「사명감 및 책임완수」 확립으로서 200만 도민의 충실한 公人이자 公僕(public servant)으로 강렬한 사명감, 책임의식을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는, 「공직프로화」 추진으로서 도민봉사를 위한 유일한 자치행정의 전문가(expert) 집단으로 직업전문주의(professionalism)를 표방한다.

넷째는, 「보람의 일터운동」 전개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실을 찾는 보람의 터전을 일구어 낸다.

다섯째는, 구태의연한 受任태도, 수수방관적인 직무태세, 아직도 변치 못한 대민자세는 다시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換骨奪胎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이어서 도민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설정,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으로서 충남이 더 이상 낙후된 지역사회가 아닌, 21세기 통일시대

및 환태평양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신적 저력을 돈구어야 한다.

둘째는, 충남정신의 재충전으로써 충효정신 → 애향심, 절의정신 → 정의실현, 선비정신 → 청렴결백, 예의정신 → 질서의식, 개척정신 → 협동심을 통해 명실공히 충남정신을 21세기 시대정신(der Zeit)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는, 「淸風운동」의 대대적 전개로써 충청인의 은근과 끈기, 균형과 조화, 爲己流汗 爲民獻身의 도덕을, 義憤慷慨, 포용력과 절제의 미덕, 멋과 풍류(청풍명월)를 통해 200만 도민의 생활철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고난극복의 합심단결」로써 현 국가적 난국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小我를 버리고 대승적 견지에서 절제, 양보, 상호이해,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는, 大同社會 건설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모두가 회구하는 21세기 복지충남시대로邁進해야 한다.

2. 초일류 도민만족행정

21세기에는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크게 부각될 것이다.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200만 도

〈표 7〉 민선자치도정 2기 정신혁명운동의 추진차원

- 의식·행태의 혁명 : 종래의 관행·구습·태도의 혁파, 쇄신
- 집단풍토의 혁명 : 사명감·책임감·봉사정신으로 재무장
- 새 정신문화 재구축 : 새로운 면모로 변화된 「정신세계」이룩

민은 도정수행의 가치표준, 도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자치도정의 본분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에는 「고객만족 행정」(CSA: Customer Satisfactory Administration) 차원을 넘어 「고객감동행정」 차원에서 고객서비스

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에 행정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란 서비스만족도에 따른 서비스공급(가격지불 및 품질평가)로 구체화됨을 재인식해야 하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차원에 입각하고 있다(이주희, 1994, pp.60~76).

〈표 8〉 민선자치도정 2기 행정서비스 만족의 차원

- 행정서비스 「공간의 만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공간이 주민들을 만족시키는 생활공간으로 형성될 때 달성
- 행정서비스 「시간의 만족」: 良質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 수록 주민은 만족하게 되는 것
- 행정서비스 「비용의 만족」: 행정조직쇄신으로 비용을 줄이거나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공급, 최대의 만족 획득
- 행정서비스 「정보의 만족」: 주민의 정보접근권 즉 알권리(access right)를 충족, 행정정보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노력
- 행정서비스 「자세의 만족」: 친절한 태도, 성심성의껏 도와주려는 對民態勢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처리 평가내용이 결정

이러한 측면에서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다음의 초일류 도민만족 행정서비스체제를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최병학 외, 1998, 6a, pp.9~11).

즉,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1기의 운영중심인 「인본·경영행정」을 더욱 세련화하면서, “지성으로 도민봉사를 하되, 가장 생산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도정품질(상품) 고급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민선자치도정 2기의 운영중심인 「대화합·신경영

행정」을 가속화함으로써, 도정시책 및 행정서비스를 「무하자·무결점·최상의 서비스·최대의 만족」을 실현,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적 고려하면서, 민간부문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100PPM」 및 「6시그마운동」 등을 뛰어넘는 행정서비스 품질혁신운동을 추진함으로써 하자율 제로화, 정밀도 최고수준, 사후관리(A/S) 철저제 마련을 기해야 한다(Crosby, 오선호 역, 1993, 8~10장).

따라서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사업을 펼쳐야 한다.

첫째, '도정의 초일류화'를 통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정상품의 고급화, 도정경영의 일류화, 공무원의 프로화 추진으로 「원(논)스톱 서비스」, 「도민평가제」, 「행정실명제」를 의무화하며 「도민제안제」, 「도민감사청구제」, 「도민발안제」, 「도민감사청구제」의 제도화(법제화)를 통한 도민 직접참정제도의 도입, 운영으로 도민위주의 가치판단, 민의수렴의 정책형성을 본격화한다.⁵⁾

둘째는 민원행정서비스 완벽만족체계 및 환류장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방객평가제」, 「부당행정 민원처리보상제」, 「현장이동 민원봉사제」는 물론 도민편익 위주의 법령·제도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혁파를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대대적 정비, 「일몰법」(Sunset Law)을 제도화시키는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3. 도정의 세계화 및 국제통상 촉진

최근 직제개편에 따라 충청남도는 종래의 「국제협력관실」 업무를 새로 신설된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로 이관, 명실공히 세계화 시책추진을 국제통상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충청남도, 1998c).

21세기는 자본 및 서비스산업의 자유이동으로 세계가 '국경이 없는' 생활체인 「지구촌시대」의 현실적 도래에 긴히 대응치 않으면 안된다. 21세기는 경제·기술·시간경쟁에 의한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시대이며, 이에 정보·지식산업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하이테크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화 속에서의 세계화 추진은 이른바 「世化」(globalization)의 시대를 열게 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체제에의 편입은 국내외적으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이미 「제3의 물결」에서는 공동협력체(엘빈 토플러)가, 「제4의 물결」에서는 공동창조체(메이너드와 머턴스)가, 그리고 이른바 「제5의 물결」에서는 共同地自體(무국경의 세계화 실현)가 각각 시대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별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전략지역 해외전시판매장 개설, 해외물산전 및 자유치설명회 개최에 큰 관심을 두면서, 충청남도 역시 세계화 추진을 기존의 국제협력에서부터 국제통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현재 이 분야의 고도화진흥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충청남도, 지역경제국 자료, 1998).

그러므로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경제실리 지방외교를 펼치는 「세계 속의 21세기 충남건설」을 실

5) 이미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 구현(책임경영 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제정), 자치경찰제 제도도입,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개편(공무원 총정원제 및 총정원의 10%선인 29,000명을 2000년까지 단계적 감축, 특히 29만명선 지방공무원 대상 2002년까지 8만명 감축),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 구현,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현장·민원인 중심 현행 법령상 9,472개 사무 대상, 중앙권한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추진), 광역행정기본법 제정 및 주민발안제·주민투표제 등 직접참정제도 도입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국무조정실, 1998. 4, pp.34~41).

현하기 위해 충청도정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IMF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國際的 解決’을 추구하면서 전세계를 향해 활짝 개방된 「열린도정 구현」을 구현해야 하며, 특히 경제실리 추구를 위한 다원적인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일본·러시아·미국은 역사적,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 먼저 주변국 지방정부와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충청도정의 국제교류협력의 발원지역으로서의 우의를 다짐해야 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21세기 주변4국 지방정부와의 생산적 교류협력을 주도하면서 세계 권역별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확대설치, 운영하고, 도정의 세계화 구현을 위한 해외교포간 공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정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회의 정례화를 추진함으로써 충청도정을 세계 속에 홍보, 국제회의 개최지역으로서의 「대한민국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펼쳐보여야 한다.

이에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도정의 세계화 추진을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제협력위주의 업무체

를 국제통상위주의 업무체계로 전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을 펼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충청남도, 1998. 6d, pp.1~4).

먼저 21세기 지방외교의 다원화 모색으로써, 중·장기적으로 5대양 6대주를 대상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뻗는 충청도정」의 다각적 교류협력체제를 정비하고, 충분한 사전분석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 가능지역을 선정, 추진하며, 특히 지역특성에 따른 교류협력 및 국제통상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한다.⁶⁾

아울러 해외사무소 확대 설치·구상에 있어서는 1단계는 「백제방」설치로 거대시장 중국진출의 전초기지(하북성, 산둥성, 북경시 중에서 선정)로 활용하며, 2단계는 미국 CA주, LA주를 중심으로 한인교포 밀집지역으로 교민과의 유대강화 및 충청남도 생산 공산품 수출 전진기지화를 구축하고 남호주, 애들레이드는 천연자원 등 경제교류 추진의 구심역할을 수행하며, 3단계는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은 유럽 동북부지역 경제교류 교두보를 구축, 프랑스 파리는 유럽 남서부지역 경제교류 전진기지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방정부 외교시대’에 걸맞는 국제통상활동을 전개한다.

6) 예컨대 1차적으로는 기존의 교류지역간 자매결연사업을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99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99년)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이어서 접근가능지역간 교류협력은 주한 외국공관의 교류추진 의사가 있는 지역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네델란드 등을 오페라 「성웅 이순신」의 순회공연을 통한 교류확대로서 추진하여 이태리(‘99. 12), 북한(2000년)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은 기타 대륙별 요충지역을 선정 교류기반 구축하기 위해 북미(미국 오클라호마주, 캐나다), 남미(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아시아(인도, 태국, 베트남), 아프리카(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순차적으로 진출한다(충청남도, 1998d 참조). 특히 이충무공 순국 400주년 기념사업은 9월 19일 아산 현충사 공연을 초연(初演)으로 금년말까지 공주, 통영, 광주, 부산, 서울, 대전 등지를 순회공연할 예정이다.

4. 지방과학기술 진흥

21세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진흥의 지방화 시책 구현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지역특성(特長)과 긴밀히 연계된 지방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조기 기반구축은 참으로 절실한 상황에 있다. 다행히도 금번 충청남도 조직개편 결과, 「국제통상국 공업기술과」 산하에 과학기술담당분야가 새로이 신설되어 그 기대가 크다(충청남도, 1998c).⁷⁾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운영체제 및 지원기반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지역과 일부의 지방대도시에 한정, 집중되어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심한 불균형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대망의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우리에게 부여된 중대한 과업 중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의 저변확대인 것이며, 이에 세계화-지방화-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어떻든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수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각급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발전, 특히 지역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산학협동 촉진, 중소기업 지원, 첨단 산업단지 유치, 각종 지역특화

전략 추진 등 지방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⁸⁾ 더욱이 지방화 시대에 있어 과학기술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러나 지방정부 총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은 고작 0.77%(1997년 2,552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겨우 6개 시도만이 과학기술행정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해 왔을 뿐이다. 어쨌든 최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관련조항을 확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며, 이로써 지방과학기술체제의 정립이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때, 종래의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의 지역사회 발전전략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 경쟁우위에 입각한 고부가가치형 과학기술 역량구축은 우리의 지역사회를 발전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충남은 지방차원의 산학협동체제 구축 및

7) 최근 중앙정부(과학기술부)의 '지방적 관심사' 중에서 돋보이는 것은 「과학기술의 지방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지방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관련영역을 전략산업기술(leading role oriented : 중화학공업기술, 첨단성장산업기술), 과학 및 공공기술(mission oriented : 메가사이언스, 기초과학, 우주·원자력·해양·에너지·국방기술), 지역산업(diffusion and innovation oriented : 중소기업)기술(전통 및 지역산업 육성, 첨단산업 창출), 지역기반 과학기술(Niche oriented : 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특화연구단위의 육성, 지역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등으로 나누고 있음은 괄목할 만하다(과학기술부, 1997, p.2).

8)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당국의 정책지원, 지방대학의 산학협동 연계 노력, 최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적 수준에서의 관심과 투자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구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대규모 테크노컴플렉스 조성 등 추후 여건변화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반이 긴밀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템 설계에 긴요하다.⁹⁾ 아울러 200만 도민 및 충청남도 공직자들의 과학기술마인드 함양 및 생활화 기반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인근 대전시의 대덕과학연구단지에 비견될 수 있는 기초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구도는 다음과 같은 전망 및 기대효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최병학 외, 1998, 6a, pp.14~17).

첫째는 민선자치도정 2기 출범 및 21세기 도래에 대응, 지방차원에서 기초과학기술 및 산학연협동사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투자증대가 가시화되면서 인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세계과학기술도 시험의체, EXPO단지 추후향배 등과 관련, 충남의 경쟁기반 조기구축을 가시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과학기술 투자노력은 「지역특화전략수행」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중·장기적 추진전망은 매우 밝으며, 특히 최근 재편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부의 지방화-기술화 연계성강화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므로, 우선적으로 「충남테크노파크」 및 산학협동체제 구축 관련, 국내외 지방정부별 과학기술 추진시책을 비교검토

후, 충청남도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학기술진흥시책 프로젝트 역점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특히 종래 충남의 과학기술운영의 저급성 및 과다한 역외의존도를 고려한다면, 과학기술진흥시책 프로젝트 추진은 그 의외에 비추어 성과가 다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방향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정책개발부서의 공조체제를 견들여 1차적으로 기초조사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면서 추진하고, 충남발전연구원 및 연구소·인근대학과 견실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과학기술 관련직제 설치에 따른 실무적 현안을 조속히 타결하면서 과학기술행정 관련 기능·역할정립, 사무분장, 정책개발 추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특히 현행 정보화정책 추진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과학기술운영시스템, 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확대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21세기형 충청남도 과학기술정책 체제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경쟁력의 조기확보를 추진하고, 특히 주무부서 및 정책개발팀을 중심으로 정보화 및 산학연 전담부서 공조체제 구축, 운영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다음의 주요사

9) 최근 9월 14일, 충청남도는 벤처기업과 신기술육성의 요람인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CTP)」를 출범시켰다. 이는 금년도 193억원을 포함, 오는 2002년까지 총 800억원을 조성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 벤처기업육성, 창업지원, 종합정보지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산-학-연-관 연계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되었다.

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도민 및 공직자의 과학기술마인드 실태 조사로써, 과학기술 관련 중소기업 기술개발, 산학협동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둘째는 과학기술 진흥관련 도내 성장잠재력 및 향후 추진기반 분석으로써, 연구단지 활용(연계화·차별화) 및 신규 경쟁력 창출기반을 조성한다.

셋째는 과학기술마인드 저변확대 추진으로써, 과학기술진흥이 '21C 지방시대의 꽃'으로 도민과 공직자의 의식전환 및 생활화에 연결되도록 한다.

넷째는 산-학-연-관 협동생산체제(co-production system) 조기구축과 효율적 운영에 주력하여야 하고, 이와 병행하여 충청남도 테크노 정책공동체 구성, 운영을 주요한 운영핵심으로 삼는다.

다섯째는 과학기술 지원센터 및 특성화 연구단지 설립 추진으로써, 이는 4대 권역별로 지역특화를 위한 개별 과학기술단지 설치구상과 관련하여 적정입지 선정후 해당 과학기술단지를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최병학 외, 1998. 6a, p.16).

이에 따라 환황해권포럼 및 국제협력과 관련,

선진국·교류국가와 과학기술협력체제 조기추진
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며, 여기에는 지방중소기업체, 지방소재 대기업체, 벤처기업, 그리고 지방대학 간의 현실적 관계증진이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실천적 노력과 정책투자의 방향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당국의 「21세기 과학기술의 지방화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긴밀히 관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기술발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다만 각자의 특성과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있을 뿐임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민선자치도정 2기는 2000년으로 사실상 진입하는 시기이며, 따라서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을 성공적으로 펼쳐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도정운영의 방향·기조 유지에 있어 현재까지의 자치도정 기반구축과 향후 도정수행의 일관성·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21세기에 내실있게 대응해 나가

〈표 9〉 4대 권역별 과학기술 특성화단지 조성구상

- 북 부 권 : 「21C 테크노컴플렉스」(아산 테크노폴리스 연계)^①
- 서해안권 : 「환황해권 해양과학단지」(마리나월드 연계)^②
- 백 제 권 : 「미래형 생명과학연구소」(충남농업종합센터 연계)
- 금 강 권 : 「계룡대 국방과학문화센터」(계룡신도시 연계)

주 : ① '98. 9. 14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CTP)」 설립

② 「서해안 산-학-연 협동단지」 설립 추진(안면도·홍성군 홍북면 일대)

는 것이 그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새로운 자치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의 가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도정운영기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자율적인 도정참여 속에 화합하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대화합·신경영행정」의 이념·전략에 입각하여 도민참여에 기초한 열린도정, 도민고충의 능동적 해결로 신뢰받는 자치도정을 이룩해야 하며, 지방정책결정과정에 도민들의 참여확대는 물론, 공직간부의 참여적 리더십 및 공직 사명의식의 획기적 강조,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21세기 발전적 비전 제시, 조정자로서의 리더십과 참여지향적 리더십, 협력지향적 공직 풍토 조성, 그리고 공직자의 준엄한 책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는 도정성과의 실체적 가시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투자의 지속적 확대 및 대단위 프로젝트를 본격화해야 하며, 특히 IMF 경제난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체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첨단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는 경쟁우위 확보차원에서 세계화·정보화를 역점 추진키 위해 특히 국제교류의 다변화·다각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정보화 및 해외인프라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섯째는 개발과 보전,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울어진 「복지충남」 건설을 위해 환경친화적 개발,

淸風운동을 중심으로 충남정신 발양운동의 범도민적 전개, 사회적 형평성 제고, 그리고 정신적 넉넉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이 동시에 갖추어진 명실공히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을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의 혼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민선자치도정 2기에는 「21세기 충남장기발전비전」이 가시화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따라서 충청남도 지방정부 체제구축과 그 연장선상에서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실현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 재편성된 부서별(실국별) 역할과 시군정 간의 긴밀한 연계성 유지로 「도정역량의 통합화」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화는 바로 지방민주주의를 꽃피우자는 것이며, 이는 견실한 지방발전을 통해 참다운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명제에 입각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조속히 「충청남도 도정·시·군정간의 효율적 연계체제」를 구축, 이를 토대로 상호유기적이며 협력지향적인 자치행정을 이루어야만 한다.

더욱이 민선지방자치의 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는 자기결정과 자기행위, 그리고 자기책임이 강조되도 있으며, 이에 도정과 시·군정간에는 「유기적인 시책연계」, 「합리적인 사무배분」, 「원활한 인사교류」, 「효율적인 재원관리」 등 전문야에 걸쳐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21세기형 자치행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도정과 시·군정 간에 산적한

당면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방정부의 성공 모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담당관협의회 자료, 1987. 7.
- 국무조정실, 정부 주요업무계획 종합, 1998. 4.
- 김동현, “변화의 시대에 있어 새로운 정부관리전략”, 유종해·김영섭 외, 21세기 한국행정론, 박영사, 1996.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 김상균 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도서출판 나남, 1996.
- 박상돈, 지방자치와 우열의 법칙, 한국경제신문사, 1996.
- 서영진, 한국의 시도지사와 지역정책, 도서출판 나남, 1996.
- 안병만, 한국정부론, 제3판, 다산출판사, 1994.
- 어윤대·방호열, 전략경영, 학현사, 1996.
- 유필화, 시장전략과 경쟁우위, 박영사, 1993.
- 이주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혁명, 도서출판 무한, 1994.
- _____,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들자, 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6.
- 임창희·가재산, 한국형 팀제, 삼성경제연구소, 1996.
- 정진호 외,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1995.
- 조동성, 경영정책과 장기전략계획 : 이론 및 사례, 영지문화사, 1991.
- 지만원, 신바람이나, 시스템이나, 현암사, 1993.

- 최병학, 인본·경영행정의 기본이념과 구현전략:자치충남도정의 지도원리, 충청남도, 1997. 8.
- _____, 21세기 충남도정발전을 위한 인본·경영행정의 추진전략,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1998. 4.
- _____, 충청남도 자치도정 제2기 도정방향과 중점시책 추진프로그램,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1998. 6a.
- _____,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의 과제, 연구논문발표, “민선지방자치 2기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충남발전연구원 공동개최, 1998. 6b.
- _____, “21세기 충청남도 자치행정체제 구축방향”, 열린충남, 제12호, 충남발전연구원, 1998. 6c.
- 최병학 외, 21세기 충남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자치도정의 핵심역량 고도화전략,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1998. 5.
- _____, 민선 2기 및 21세기 충청남도 자치도정의 핵심역량 고도화전략,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1998. 6.
- _____, 1999년도 도정여건과 정책방향:역동적 도정수행으로 21C 진입기반구축, 현안과제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1998. 8.
- 충청남도, 1998년도 도정방향과 중점시책, 1997. 9.
- _____, 2000년대를 향한 도정 1000일 목표관리 행정계획, 1998. 3.
- _____, 제32대 심대평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상황, 1998. 4.
- _____, 도정백서, 1998. 6a.
- _____, 제2의 건국운동 추진기획단 설치·운영계획, 1998. 6b.
- _____, 민선 2기 도정방향, 1998. 6c.
- _____, 세계화 추진구상, 1998. 6d.
- _____, 민선 2기 도정의지, 1998. 7a.
- _____, 21세기 충남시대를 향한 대장정을 열며:도지사 기자회견문, 1998. 7b.
- _____, 신경영행정 추진구상안, 1998. 8a.
- _____, 도정보고:시군의회의장 간담회, 1998. 8b.
- _____, 도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규칙 제·개정계획, 1998. 8c.
- _____, 1999년도 도정방향과 중점시책, 1998. 9.
-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인본행정으로 열어간다, 1997. 12.
- 하인호, 신경영 학습조직, 삼성경제연구소, 1996.
-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과제, 1997. 7.
- 한국과학재단, 지역협력연구센터 현황자료집, 1997.
- 행정자치부·한국경제신문사, 지방자치단체 통상관계 공무원 연찬 및 우수사례 발표집, 1998. 3.
- Crosby, Philip B, 오선호 역, QM혁명: 전사적 품질경영 신기법, 신세대, 1993.
- Levin, Martin A. and Sanger, Mary Bryna, 이언호·김선빈 공역, 선진행정의 길: 공공적 책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행정, 삼성경제연구소, 1996.

- Ansorff, H.I., *From Strategic Planning to Strategic Management*, New York : Willey & Sons, 1979.
- Barbalet, J.M., *Citizenship*,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1995.
- Chandler, Alfred D., *Strategy and Structure*, Cambridge, Mass. : MIT Press, 1962.
- Howard, Elcock, *Local Government*, Cambridge, London : Great Britain at the Univ. Press, 1982.
- Morsher, F.C.,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 Past, Present, Future*, Alabama : The Univ. of Alabama Press, 1985.
- Naisbitt, John, *Megatrends :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New York : Warner Books, Inc., 1982.
- Osborne, David and Gaebler, Ted, *Reinventing Goverment :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 A Plume Book, 1993.